

가짜뉴스의 심리학적 이해와 대응: 비판심리학과 공동체심리학 관점에서

김 보 경¹⁾ 이 혜 원²⁾ 안 현 의[†]

본 연구는 가짜뉴스를 단순한 사실 오류나 허위 정보의 문제를 넘어, 개인의 심리와 사회 구조가 교차하는 복합적 사회심리 현상으로 개념화하며, 기존의 가짜뉴스에 대한 연구가 확증 편향이나 정서적 반응 등 개인 내부 요인에 집중해 온 것과 달리 가짜뉴스의 수용과 확산의 심리적 기제를 인지적·정서적·행동적·집단적·구조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판심리학과 공동체심리학이라는 두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가짜뉴스를 둘러싼 권력 관계와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고, 실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비판심리학은 거시적 권력 구조와 이데올로기, 공동체심리학은 지역 기반의 상호작용과 실천에 주목하며, 두 관점은 서로 보완적으로 심리학의 공공성 회복과 사회 구조 개입 가능성을 확장시킨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바탕으로 시민 팩트체크 활성화, 지역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공동체 회복력 강화,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네 가지 실천 전략을 제안하며, 심리학이 개인 치유를 넘어 공공 회복과 구조 전환에 기여하는 학문으로 기능해야 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러한 전략과 관점을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용·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심리학의 사회적 책무와 실천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가짜뉴스, 비판심리학, 공동체심리학, 권력구조, 사회적 맥락, 심리학의 공공성

1)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2) 제2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 교신저자 : 안현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포스코관 425호, E-mail: ahn12@ewhain.net



Copyright ©2025,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가짜뉴스(Fake News)는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가짜뉴스란 사실이 아닌 정보가 뉴스 형식으로 배포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목적으로 조작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포함한다(Tandoc et al., 2018). 이러한 허위 정보는 의도적으로 생산되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중을 오도하는 특징을 지니며, 단순한 오보(misinformation)와 달리 명백한 기만의 의도와 목적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Allcott & Gentzkow, 2017; Nyhan & Reifler, 2010).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민주 사회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한다. 하지만, 가짜뉴스는 의도된 허위 정보로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발전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확산은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구조적으로 용이하게 만들고 있으며(Allcott & Gentzkow, 2017), 그 파급력은 정치 영역을 넘어 공중보건, 경제, 일상생활 전반에까지 확대되고 있다(조은희, 2022). 특히 정보 과잉 사회에서는 개인이 ‘실제 진실’보다 ‘원하는 진실’(preferred truth)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정보의 객관성보다 정서적 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가짜뉴스의 확산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Tandoc et al., 2018). 이러한 정보 수용 방식은 단순히 개인의 인식과 정서적 반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신념 체계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가짜뉴스는 정치 진영 간 적대성을 고조시키고, 상대 진영의 정

당성을 훼손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며 이는 개인의 신념과 정서 반응을 극단화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단절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이성욱, 2024). 더 나아가 가짜뉴스는 공중보건, 경제, 사회적 논쟁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신뢰 기반을 점차 약화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사회 구조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 내 세대 갈등이나 일상적 대화 속 갈등 유발 등 개인 간 관계의 긴장으로도 나타나며(최창식, 2022), 사회적 대립뿐 아니라 미시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복합적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법적 규제, 기술적 모니터링, 정책 수립 등 제도적 차원의 다양한 대응이 시도되어 왔다(김종현, 2019).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상충하는 문제, 기술 변화에 따른 실효성 저하 등 여러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가짜뉴스에 대한 규범적·법적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종현, 2019; Tandoc et al., 2018). 특히 가짜뉴스의 확산에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와 같은 다양한 인지적 요인 뿐 아니라 두려움, 분노, 불안 등의 정서적 자극을 통해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깊이 작용한다(Pennycook & Rand, 2018). 이는 가짜뉴스가 단순한 정보의 오류나 의도적 조작을 넘어, 가짜뉴스를 접하는 수용자의 심리적 특성과 그들이 처한 사회적 맥락이 결합된 복합적인 현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짜뉴스는 정보의 왜곡이나 기술적 규제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다층적인 심리·사회적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통합적인 분석 틀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은 정보 수용과 판단 과정, 정서적 반응, 집단 심리 등 가짜뉴스 확산의 핵심 기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학문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짜뉴스에 관한 학문적 논의는 언론학, 커뮤니케이션학, 정보학 등 심리학의 인접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심리학계의 체계적인 탐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심리학적 관점에서 가짜뉴스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을 지닌 가짜뉴스 현상에 대해 심리학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 수준의 인지적 편향이나 정서적 반응에 국한되어 있고, 정보 리터러시 교육이나 사실 검증 기술과 같은 제도적·기술적 처방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접근은 가짜뉴스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과 구조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가짜뉴스는 단순한 정보의 왜곡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인간 심리가 작동하는 방식이 반영된 심리적·집단적 메커니즘의 산물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심리학의 실천적 개입이 요구된다.

한편, 정치적·경제적 양극화 등 국내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최근 한국 심리학회에서도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정안숙 외, 2017) 심리학의 공공적 실

천과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비판심리학(critical psychology)’이나 ‘공동체심리학(communitary psychology)’과 같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적 접근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류승아, 2023). 비판심리학은 기존 심리학이 간과해온 권력, 이데올로기, 사회 불평등 등의 구조적 문제를 중심에 두고, 심리학이 어떻게 사회적 억압이나 지배 질서에 기여해왔는지를 성찰하며, 평등과 정의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삶을 개선하고자 한다(Fox et al., 2009). 공동체심리학은 사회정의(Social Justice), 권한부여(empowerment) 등을 핵심 가치로 삼는 심리학적 접근으로 개인의 문제를 그들이 처한 사회적 맥락 및 공동체 자원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정안숙, 2015). 이는 기존 심리학이 주로 관심을 가져왔던 개인의 내적 변화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협력, 참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구조적 변화를 함께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Nelson & Prilleltensky, 2020).

이러한 관점에서 비판심리학과 공동체심리학은 가짜뉴스의 확산을 단순히 개인의 인지 오류나 무지로 환원하지 않고, 이를 둘러싼 구조적·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 두 접근은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집단적 토론 공간의 마련,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개선 등과 같은 구체적 실천 전략을 통해 개인의 비판적 시각을 함양하는 한편, 공동체 차원의 개입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함께 도모한다는 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다층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심리학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성과 실천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개인과 집단 수준에서 사회적 맥락과 함께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심리학과 공동체심리학의 이론적 관점을 적용하여,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심리학의 개입 가능성과 사회적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보 혼란의 시대에 심리학이 수행할 수 있는 공공적 책무와 실천적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짜뉴스 수용 및 확산의 심리적 메커니즘

가짜뉴스의 정의와 특징

가짜뉴스(Fake News)는 정보의 형식, 의도성, 사회적 파급력 등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어 왔다. 학문적 관점에서는 가짜뉴스를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정치적으로 조작된 허위 정보로, 주로 소셜 미디어에서 확산되는 뉴스 형식의 콘텐츠로 정의하며(Allcott & Gentzkow, 2017), 정보가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며, 수용자의 정치적 신념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 목적성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한다. 언론적 관점에서는 가짜뉴스가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되며, 정치적 선전이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생산·확산되는 허위 정보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과 생산 구조에 주목한다(New York Times, 2016; BBC, 2017). 반면, 법률적 관점에서는 가짜뉴스를 공공의 신뢰와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고의적이고 조작된 허위 정보로 정의하며, 그 사

회적 해악성과 유포 목적에 따라 규제 대상 여부가 판단된다(EU, 2018; 방송통신위원회, 2020). 이처럼 관점에 따라 정의는 상이하지만, 가짜뉴스는 대체로 뉴스의 외형을 띠면서도, 정치·경제적 목적아래 고의적으로 조작된 허위 정보라는 공통된 속성을 지닌다.

가짜뉴스의 확산 경로와 구조적 특징: 가짜뉴스는 어떻게 퍼지는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제작된 가짜뉴스는, 사회 구조적 조건과 수용자의 심리적 기제가 맞물려 증폭되며, 다음과 같은 단계적 경로를 따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Munusamy et al., 2024). 첫째, 가짜뉴스는 정치적 목적(예: 여론 조작, 정당 지지 유도)이나 경제적 이득(예: 클릭 수 기반 광고 수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되며, 뉴스 형식을 띠기 때문에 수용자는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Allcott & Gentzkow, 2017). 둘째, 소셜미디어는 사용자 반응 기반의 알고리즘에 따라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한다. 특히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알고리즘은 분노, 충격, 공포와 같은 강한 정서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가짜뉴스의 빠른 확산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Vosoughi et al., 2018). 셋째, 사용자들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선호하며,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정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저하되어, 허위 정보라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수용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활용하여 수용을 유도한다(Pennycook & Rand, 2018). 넷째, ‘좋아요’, 댓글, 공유 수 등 사회적 동조 신호는 콘텐츠의 신뢰도를 강화

하며, 다수가 지지하거나 공유하는 정보일수록 더 신뢰하거나 따르려는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가 작동한다(Sundar & Nass, 2001). 이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사회적 신호를 통해 비판적 사고 없이 정보가 수용되는 경향을 더욱 강화한다(Park & Chai, 2024; Le, 2024). 다섯째, 이러한 정보는 별도의 사실 검증 없이 즉각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유되며, 반복 노출은 결국 진실처럼 인식되는 진실 착각 효과(illusory truth effect)를 유발한다(Pennycook & Rand, 2019). 마지막으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혐오, 비난, 음모론적 프레임에 담은 가짜뉴스는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며, 혐오 감정과 불신을 확산시켜 민주적 의사소통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한다(Yang & Lee, 2021; 이성욱, 2024). 이와 같은 생산-노출-심리-동조-확산-갈등의 단계적 흐름은, 가짜뉴스가 단순한 정보 왜곡을 넘어서 사회적 구조와 개인 심리에 깊이 작용하는 복합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가짜뉴스 수용과 확산의 심리적 메커니즘: 왜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믿고 퍼트리는가?

가짜뉴스가 수용되고 확산되는 과정은 개인-집단-사회 구조 수준에 걸친 복합적인 심리사회적 메커니즘의 결과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살펴보는 동시에 집단적 및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작용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각 측면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가짜뉴스의 수용과 확산을 촉진하는 다층적 상호작용 구조를 형성한다.

개인적 차원

인지적 요인

가짜뉴스의 수용과 확산에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인지적 취약성이 관여한다. 사람들은 정보를 완전히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여러 인지 편향과 휴리스틱(heuristic)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가령 확증편향(confirmatory bias)¹⁾ 경향은 기존 신념을 더욱 강화하도록 정보 선택을 왜곡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적 수용을 방해하는 핵심 기제 중 하나이다. 정치적 신념이 강할수록 이 경향은 두드러지며, 이는 가짜뉴스가 실제로 정당되더라도 기존 믿음이 쉽게 수정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Pennycook & Rand, 2019). 또한,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는 기존 신념과 상충되는 정보가 불편한 심리 상태를 유발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왜곡된 정보를 선호하는 경향을 강화시킨다(Matz & Wood, 2005). 특히 사회적 정체성이 강할수록,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와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Oswald & Bright, 2021). 이러한 경향은 비합리적인 정보 수용을 강화하며, 결과적으로 기존의 신념과 가치관을 더욱 고수하게 만든다.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 경향 역시 가짜뉴스의 확산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정보처리에 있어 최소한의 인지적 노력을 들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짜뉴스는 간결하고 자극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이러한 인지 특성을 자극한다. 특히 SNS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1) 개인이 기존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그와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경향(Nyhan & Reifler, 2010).

정보 소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수용자는 직관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며, 사실 검증이나 비판적 검토는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분석적 사고 성향이 약한 사람일수록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로 인해 허위 정보를 사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ennycook et al., 2020). 더불어,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과 진실성 착각 효과(illusory truth effect)도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는데, 자주 접하거나 익숙한 정보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신뢰감을 유발하기 쉬우며, 반복 노출은 허위 정보를 진실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가짜뉴스 제작자들은 이 같은 인지적 취약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반복 노출과 자극적 메시지를 통해 허위를 퍼뜨린다.

이처럼 다양한 인지적 요인은 개인의 비판적 사고를 저해할 뿐 아니라 정보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강화시킨다(Pennycook & Rand, 2018). 비판적 사고는 교육 수준, 과학적 소양, 디지털 정보판단 능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낮은 교육 및 지식 수준은 허위 정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저해하는 반면, 정보판단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가짜뉴스에 덜 속는 경향을 보인다(Guess et al., 2019). 결과적으로 다양한 인지적 왜곡 및 비판적 사고 저하는 사회 전반의 정보 수용 환경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허위 정보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킨다(Pennycook & Rand, 2019). 따라서 개인의 인지적 한계와 편향성은 가짜뉴스 수용의 첫 관문이자, 그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심리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정서 및 행동적 요인

가짜뉴스는 개인에게 불안, 우울, 정서적 탈

진 등 다양한 부정적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며, 이는 심리적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은 이러한 정서 반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Lin et al., 2020).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일시적 반응에 그치지 않고, 회피, 분노 표출, 백신 거부 등 현실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 심각성은 단순한 정보 왜곡을 넘어 개인 삶의 질과 사회적 안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는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일상 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허위 정보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접종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Loomba et al., 2021; Wang et al., 2024; Caceres et al., 2022). 또한,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거나, 특정 식품·영양제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같은 잘못된 정보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의학적 근거 없는 대체 요법에 대한 의존을 부추기기도 했다(Chou et al., 2020; Roozenbeek et al., 2020). 이처럼 가짜뉴스로 인한 정서 반응은 단순한 심리적 불편을 넘어 행동 변화로 확장되며, 건강과 관련된 판단과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이는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공동체의 보건과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가짜뉴스는 분노와 같은 강렬한 정서를 유발함으로써, 단순히 개인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허위 정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고조시키며, 이는 개인 간 갈등 뿐 아니라

집단 간 대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Walter et al., 2021). 특히 분노는 기존 신념과 상충하는 정보에 직면했을 때 인지적 협상의 여지를 줄이며, 타인에 대한 비난이나 배제와 같은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Taber & Lodge, 2006). 이러한 반응은 대화나 토론을 통한 상호이해를 방해하고, 사회 내 신뢰와 연대의 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분열과 갈등을 더욱 고착화 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행동으로도 쉽게 이어진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분노와 같은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뉴스를 접했을 때, 그 감정을 해소하고자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공유’, ‘댓글’ 등 행동으로 즉각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Weeks, 2015). 이때 자극된 ‘감정의 사회적 공유(social sharing of emotion)’ 욕구는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려는 충동을 강화하며, 감정 기반의 정보 확산을 촉진한다(Rimé, 2009).

이러한 경향은 SNS 환경에서 더욱 가속화된다. SNS 알고리즘은 강한 정서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하고 반복 소비를 유도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는 사실 기반 정보보다 더 널리 확산되고 여론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Rathje et al., 2021). 결국, SNS를 중심으로 한 소통 방식에서는 이성적 정보 분석보다 분노와 같은 정서적 반응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Cho et al., 2021), 이는 정치적 양극화나 사회적 혐오의 확산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적 요인이 된다. 나아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한 여론 왜곡을 넘어 차별적 언행이나 폭력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Solomon, 2022), 이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의 통합을

위협하는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사회적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가짜뉴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개인은 우울감과 무력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보 과부하로 인해 진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정보적 학습된 무기력감(informational learned helplessness)’에 빠질 수 있다(Nisbet & Kamenchuk, 2021). 이러한 상황은 정보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유발하며, 불확실성과 통제력 상실에 대한 인식은 심리적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Bawden & Robinson, 2009; Soroya et al., 2021). 이처럼 반복적으로 부정적 정보에 노출될 경우, 현실 인식이 왜곡되고 자기효능감이 저하되며, 심리적 절망감이 심화된다. 결과적으로 가짜뉴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 반응은 단순한 감정적 불편을 넘어, 인지 기능과 정신건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정보 환경에서 개인의 정서적 회복력(emotional resilience)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더욱 요구하게 만들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안정성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Halpern & Dunn, 2021).

그밖에 가짜뉴스는 공포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한다. 공포는 위협 탐지 시스템(threat detection system)을 활성화시켜 개인의 정서적 과민 반응을 유도하며, 이로 인해 정보의 진위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든다(Fessler et al., 2014). 특히 생존과 직결된 위협 정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한 인간의 심리는, 허위 정보 일지라도 ‘위험’으로 인식되면 즉각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전염병이나

테러 위협에 대한 허위 정보는 과도한 회피 행동이나 극단적 경계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불안, 분노, 우울, 공포 등 강렬한 부정 정서를 유발함으로써, 정보의 진위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합리적 사고를 방해하고 인지적 판단력도 저하시킨다(Martel et al., 2020). 정서 반응은 단순한 감정 상태를 넘어 정보 처리 방식과 사회적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심리적 저항력을 약화시킨다. 나아가, 이러한 정서적 과급력은 건강 행동, 사회적 신뢰, 공동체 내 연대감과 갈등 등 외현적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 전반으로 확장된다.

미디어 환경을 통한 증폭과 집단적 차원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에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변 집단의 신념, 행동, 규범의 영향을 깊이 받는다. 가짜뉴스의 수용과 확산 역시 개인의 심리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 구조와 환경적 맥락 속에서 더욱 가속화된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무엇보다 가짜뉴스가 빠르게 유통되고 소비되는 구조적 조건을 제공한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탈중앙화 되면서, 출처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특히 동질적 성향의 이용자들이 모여드는 에코챔버(echo chamber)²⁾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편향된 정보만

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허위 정보에 대한 확신을 강화한다. 이러한 동질 집단 내 정보 순환은 ‘친숙도 기반 신뢰(familiarity-based trust)’를 높이고, 반복 노출 효과에 따라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의 신뢰도를 증폭시키는 인지적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집단동일시와 사회적 분열

가짜뉴스는 집단동일시(social identification)와 동조 압력(conformity pressure)을 통해 개인의 신념을 강화하고, 나아가 집단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개인은 자신이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예: 정치 집단, 종교 공동체, 팬덤 등)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자신이 속한 내집단(in-group)의 구성원이 공유하거나 신뢰하는 정보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반면, 외집단(out-group)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Marwick & Lewis, 2017). 가짜뉴스는 이러한 인지적 편향을 자극하여 내집단의 정당성과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동시에 강화한다.

특히, 정치적·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가짜뉴스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자극하여, 개인이 기존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반향실 효과(echo chamber effect)³⁾와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⁴⁾으로 심화되며, 결과적으로 상이

단하고 기존 신념만을 강화하게 되는 정보 환경(Pariser, 2011).

2) 정치적·사회적으로 유사한 성향을 가진 개인들이 동일한 의견과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유하고 소비함으로써, 상반된 정보에 노출될 기회를 차

3)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접하면서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는 현상(Pariser, E, 2011),

4)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선호에 맞춰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현상(Pariser, 2011).

한 집단 간의 이해와 공감을 차단하고, 이분법적 사고와 배타성을 조장한다(Pariser, 2011).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 집단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가짜뉴스는 상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유발하며(Allcott & Gentzkow, 2017), 이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Pennycook & Rand, 2021). 이러한 양상은 국내외 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는 허위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 집단 간 갈등이 격화된 바 있다(Howard et al., 2017). 당시 러시아 기반의 트위터 계정들이 반이민 및 인종차별적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포하며, 영국 내 커뮤니티 간 긴장을 고조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음모론적 가짜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키고 정치적 성향에 따른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신하연 외, 2024). 이러한 사례들은 가짜뉴스가 개인의 심리적 경향성을 넘어서,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집단극화와 적대적 환경 조성

가짜뉴스는 집단 극화(group polarization)를 촉진하여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킨다(McCright & Dunlap, 2011). 집단 극화란 유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이 증가할수록 의견이 점점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Solomon, 2022). 이러한 현상은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과 집단 내부에서의 정보 재확산(intragroup diffusion) 구조 속에서 발생하며, 반대 견해에 대한 노

출이 차단된 상태에서 더욱 심화된다(Bessi et al., 2016). 예를 들어, 백신 반대 집단이 백신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가짜뉴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과장된 위험 인식이 집단 내에서 증폭되며, 백신을 지지하는 집단과 의견충돌 및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다. 이러한 정보 순환 구조는 정치적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실제로 2016년과 2020년 미국 대선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가짜뉴스가 선택적으로 확산되며 유권자들의 인식과 투표 행동에 영향을 미쳐,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Allcott & Gentzkow, 2017; Pennycook & Rand, 2021).

더 나아가, 가짜뉴스는 적대적 사회 환경(hostile environment)의 형성을 촉진한다. 특정 인종, 종교, 성별, 정치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정보는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며, 이는 혐오 범죄 및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Shao et al., 2018).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들에 대한 편견과 폭력이 급증한 바 있다(Yang et al., 2021). 미얀마에서는 로힝야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혐오성 허위 정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며, 대규모 공동체 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Mozur, 2018). 이는 단순한 정보 확산이 아닌, 외집단에 대한 적대 정서를 이용해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처럼 왜곡된 정보는 특정 집단을 악의적으로 묘사하고 공포심을 자극함으로써 외집단 혐오(outgroup derogation)와 낙인 효과(stigma)를 유발한다. 특정 종교나 인종 집단을 ‘잠재적 위협’으로 묘사하는 가짜뉴스가 반복적으로 유포될 경우, 이들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나 공공정책에서의 배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정당화하는 구조적 폭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DiResta et al., 2019).

민주주의와 사회 신뢰 저하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 중 하나인 사회적 신뢰(social trust)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한다. 사회적 신뢰는 개인이 정부, 언론, 공공제도, 타인에 대해 신뢰를 갖는 정도를 의미하며(Klutsey, 2021), 이는 시민 참여, 제도적 안정성, 공공 협력의 핵심 전제이다. 가짜뉴스는 공식 정보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진실과 허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냉소주의(cynicism)를 유발한다(Nyhan & Reifler, 2010).

특히 가짜뉴스는 언론과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공적 담론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반복되는 허위 정보 노출은 공신력 있는 정보원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보 소비의 기준을 흐릿하게 만든다. 선거와 정치 제도에 대한 가짜뉴스는 시민들의 제도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적 무관심 또는 급진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Tucker et al., 2018). 이는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회의로 발전하며, 장기적으로는 체제 전반의 붕괴 가능성까지 내포하게 된다(Levitsky & Ziblatt, 2024).

Reglitz(2022)의 이론적 분석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시민들 간의 ‘인식적 신뢰(epistemic trust)’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이는 민주주의가 전제하는 ‘공통된 사실 기반의 합리적 논의’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시민들이 정보의 진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현실을 믿기 시작할 때, 합리적 토론과 합의 기반의 정치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사실과 허위가 뒤섞

인 정보 환경은 ‘공통된 현실(shared reality)’의 기반을 약화시켜 시민들 간의 상호 이해와 합의를 어렵게 만든다(Ekström et al., 2021). 이는 사회 구성원 간 협력과 연대를 저해하며, 공론장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Farkas와 Schou(2018)는 덴마크 내 극우 가짜뉴스 미디어가 주요 언론에 대한 불신을 유도하고, 정치적 냉소주의를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투표율 하락과 시민적 참여 약화를 초래한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신뢰 저하는 단순한 정보 오염을 넘어, 민주주의 사회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가짜뉴스는 단순한 정보 왜곡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침식시키며, 이는 민주주의의 존속 기반인 공론장과 제도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따라서 신뢰 회복은 단순한 팩트체크를 넘어서, 민주주의 방어의 핵심 과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 대응 현황과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심리학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법·제도적 규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플랫폼 자율규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용희 외, 2023). 한국 역시 정보통신망법, 형법, 선거법 등을 통해 허위 정보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과 미디어 교육을 확대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그러나 이러한 제도 중심의 접근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규제 실효성의 한계, 자율규제의 미비 등으로 인해 복잡한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

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방송통신위원회, 2022).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사회적 가치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대응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리학의 역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김용희 외, 2023).

가짜뉴스는 단순한 정보의 오류를 넘어 사회적 갈등과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복합적 문제로, 심리학은 이에 대한 구조적이고 다층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국내 가짜뉴스 연구 동향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팩트체크 확대, 플랫폼 책임 강화와 더불어,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개입과 시민 참여 기반의 정보 생태계 구축이 주요 대응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남승현, 2022). 이는 심리학이 단순히 개인의 정보 판단 능력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정보 환경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학문적 주체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정보 회복력(information resilience)’의 개념은 심리학의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개인이 허위 정보를 판별하고 저항하는 능력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정보 혼란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며, 심리학적 개입이 사회적 회복기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판심리학과 공동체심리학은 가짜뉴스 문제를 구조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 두 관점은 가짜뉴스 대응이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개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의 저항 역량 함양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천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전환적 관

점을 제공한다.

비판심리학 관점에서 본 가짜뉴스

‘비판심리학(critical psychology)’은 전통 심리학이 개인의 내면에 과도하게 집중함으로써 사회 구조적 요인과 권력 관계를 간과해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Fox et al., 2009). 이 관점은 심리적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결함이나 인지적 오류로 환원하지 않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결과로 본다. 또한 개인의 고통을 단지 내면의 결함이나 병리로만 이해하기보다, 이를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를 강조한다.

비판 심리학은 다양한 실천 사례를 통해 기존 심리학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해왔다. 가령, 빈곤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는 정신적 고통을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 부족의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경제적 박탈이 초래한 결과로 이해한다(Wright et al., 2020). 더 나아가, 정신질환이 생산성과 의사결정 능력을 저하시켜 다시 빈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 역시 지적한다(Ridley et al., 2020). 이는 심리적 개입이 단지 개인 회복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원, 정책, 공동체 조직화 등과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여성 정신건강을 다룬 페미니즘 심리학 연구들 역시 유사한 관점을 보여준다. 우울, 섭식장애 등의 고통은 여성 개인의 취약성 때문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의 성역할 강요, 신체 이미지 통제, 젠더 기반 폭력 등 구조적 억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Young, 2024). 상담 현장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맥락을 반영한 개입은 자기비난을 줄이고, 주

체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로 이어진다. 실제로 Smith(2019)는 복합 트라우마와 중증 정신질환을 겪는 여성에게 사회구조를 고려한 페미니즘 치료가 의미 있는 회복 경험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난민 및 이주민의 심리적 고통 역시 단순한 PTSD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강제이주, 인종차별, 제도적 배제 등과 맞물린 구조적 현실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재정착 이후의 개입에서는 문화적 민감성, 공동체 기반 접근, 정치적 권리 회복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Miller & Rasmussen, 2010), 젊은 아프간 난민들과의 협력적 개입 사례에서는, 전통적인 전문가 중심 모델보다는 상호작용적이고 공동체적 접근이 더 효과적임이 밝혀진 바 있다(Bajoghli et al., 2023).

이처럼 비판심리학은 기존의 심리학이 개인의 병리에만 초점을 맞췄던 한계를 넘어, 인간의 고통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를 분석하고, 저항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천적 학문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짜뉴스는 단순히 개인의 정보 판단 능력 부족이나 인지적 오류로 환원될 수 없다. 오히려 가짜뉴스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내재된 권력 불균형, 사회적 배제, 정보 접근의 격차, 언론의 상업화와 정치화 등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비판심리학은 가짜뉴스를 단순히 ‘잘못된 정보’의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위해, 왜 생산하고 유포하는가’를 질문한다. 이는 가짜뉴스가 특정 사회집단을 의도적으로 낙인찍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 구조를 재생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조직적인 허위 정보 유포는 정보 주권을 침해하고, 민주

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은 개인의 인지적 역량 강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보 불평등, 권력 구조, 사회적 낙인의 작동 방식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작업과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비판심리학이 제시하는 실천적 지향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병리화의 함정과 심리학의 탈정치화 비판

전통 심리학은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주로 내면의 결함이나 병리적 특성으로 환원해 설명해 왔으며, 이로 인해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를 배제한 채 그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고 문제를 개인화하는 경향을 강화해 왔다(Fox et al., 2009). 비판심리학은 이러한 환원주의적 시각을 비판하며, 심리학이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맥락과 권력 관계 속에서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짜뉴스 문제 역시, 단순히 개인의 인지적 오류나 정보 해석 능력 부족으로만 진단할 경우, 그 확산을 촉진하는 사회적·정치적 조건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가짜뉴스 수용자를 ‘비합리적’이거나 ‘정보에 어두운’ 개인으로 병리화하는 시각은 정보 불평등, 미디어 구조의 문제, 사회적 배제와 같은 근본적 요인을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심리학이 이러한 문제를 개인 차원의 교육이나 인지 훈련에 국한시킬 경우, 사회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기존 권력 질서를 정당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이는 심리학이 사회적 맥락을 배제하고 문제를 오직 개인 수준으로만 다루는 경향과 깊이 맞닿아 있다. 따라서 가짜뉴스에 대한 심리학적 대응은 병리화의 함정을 경계하고, 개인의 특성을 넘어

서 그들이 처한 사회 구조와의 상호작용을 함께 분석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정보와 권력: 진실의 생산 구조에 대한 비판

비판심리학은 정보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관계 속에서 생산되고 유통된다는 점을 강조한다(Pulido-Martínez & Tamayo, 2024). 즉, ‘진실성’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에 의해 형성되며, 이는 가짜뉴스가 단순한 오류가 아닌 권력 경쟁의 산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정보가 ‘진실’로 간주되고 어떤 목소리가 배제되는가는 사회적 구조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심리학은 정보의 유통과 수용 과정에 작용하는 권력의 흐름, 그리고 담론의 배제 구조를 비판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어떤 조건에서 믿음이 형성되고 강화되는지를 밝히고, 그 과정을 통해 정보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의 메커니즘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탐색과 분석은 심리학이 권력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사회적 불평등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실천적 학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핵심적인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적 불평등과 정보 환경에 대한 성찰

가짜뉴스는 단지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 속에 개인이 놓여 있는가의 문제이다. 실제로 정보 접근성과 해석 역량은 교육, 계층, 지역, 정치적 소외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Marwick & Lewis, 2017). 가령,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저소득층이나 농촌 지역 사람들은 정보 분석 능력에서도 불평등을 겪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가짜뉴스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정보의 확산을 급격히 가속화하며, 정보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허위 정보가 널리 퍼지도록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비판심리학은 개인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교육 격차, 정치적 배제, 미디어 접근성의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을 심리학적 개입의 핵심으로 제시한다. 이는 심리학이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공동체심리학의 관점과도 일치한다.

심리학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적 전환

비판심리학은 심리학이 단지 개인의 적응이나 치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위한 집단적 실천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Nelson & Prilleltensky, 2020). 이러한 관점에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대응 역시, 정보 리터러시 향상 등 개인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공적 담론의 민주화, 정보 접근의 평등성, 비판적 소통 문화의 확산 등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비판심리학은 가짜뉴스에 대한 심리학의 역할을 ‘비판적 감수성의 함양’과 ‘사회 구조 변화의 촉진’이라는 두 축으로 제시한다.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정보가 왜 등장하고 누구의 이익을 반영하는지를 질문할 수 있는 비판적 시민성(critical citizenship)을 함양하는 것이며, 이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 전

략이 될 수 있다.

비판심리학이 강조하는 비판적 시민성 함양과 사회 구조 변화 촉진의 방향성은, 공동체심리학이 추구하는 정보 접근성 평등, 사회정의 실현, 시민참여 기반의 집단적 실천 전략과 긴밀히 연결된다. 이러한 접근은 심리학이 개인 수준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 구조 차원에서 실천적 개입을 확대해야 함을 시사하며, 가짜뉴스 문제 대응에 있어 심리학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공동체심리학 관점에서 본 가짜뉴스

가짜뉴스에 대한 심리학적 대응의 또 이론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공동체심리학은, 개인을 고립된 존재가 아닌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집단의 역량 강화와 구조적 개입을 강조한다. 이는 가짜뉴스 대응에서도 단순히 개인의 인지적 능력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단이 함께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정보 접근성과 검증력, 시민 참여의 확장은 공동체적 차원의 집단 역량 구축과 직결되며, 이는 지속 가능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Harlem Children's Zone(HCZ) 프로젝트는 공동체심리학의 원칙을 실천한 대표적 사례로, 뉴욕시 하렘 지역의 저소득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정을 대상으로, 빈곤, 교육 격차, 건강 불균형 등 구조적 불평등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산전 교육부터 성인기까지 생애 전 주기를 포괄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전체를 아동 발달에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태학적 접근을 활용하였다(Harlem Children's Zone, 2009). 또한 지역 주민과 부모, 교사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동체 내부의 주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으며, 예방 중심·형평성·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학업 성취도 향상, 십대 임신율과 청소년 범죄율 감소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Policy, 2018).

이 외에도 공동체심리학은 다양한 국가와 문화적 맥락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모델로 적용되고 있다. 짐바브웨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정 벤치(The Friendship Bench)'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노인 여성들이 벤치에 앉아 주민들의 고민을 듣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하였고, 이는 문화적 적합성과 접근성을 높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Chibanda et al., 2016). 미국에서는 만성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 모델이 도입되어, 주거를 우선 제공한 후 심리사회적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자율성과 회복을 촉진하는 개입이 이뤄졌다(Tsemberis et al., 2004). 핀란드에서는 정신병 치료에서 가족과 환자 중심의 '오픈 다이얼로그(Open Dialogue)' 접근이 시행되어, 치료에 있어 대화와 관계 회복을 중시하는 생태학적·참여적 접근이 실현되었다(Seikkula & Olson, 2003).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서는 전쟁과 트라우마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가자 공동체 정신건강 프로그램(GCMHP)'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기반의 심리사회적 개입을 통해 지역 주민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Qouta et al., 2008).

이처럼, 공동체심리학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보다 넓은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며, 권한부여, 참여, 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Trickett, 2009). 이러한 접근은 심리적 현상을 구조적 조건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는 시각을 바탕으로 하며, 건강 증진, 사회정의, 시민참여 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정안숙, 2015). 가짜뉴스 문제에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면, 정보 접근성 향상, 공동체 기반 대응, 시민의 비판적 참여 확대는 단순한 개입을 넘어 구조적 전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정보 접근의 불평등과 권한부여(empowerment)

공동체심리학은 정보 접근성과 자원의 불균형을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참여의 핵심 변수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짜뉴스 수용은 디지털 격차, 정보 해석 능력의 불균형, 신뢰 가능한 정보의 부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Trickett, 2009; Marwick & Lewis, 2017).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고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짜뉴스에 더 쉽게 노출되고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공동체심리학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구성원의 비판적 사고력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권한부여(empowerment)’ 중심의 실천을 강조한다. 또한 지역 기반 교육, 주민 주도 팩트체크 활동, 정보 주권 회복을 위한 참여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동적 정보 수용자를 능동적 정보 생산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rilleltensky, 2008; Mihailidis & Viotry, 2017). 이러한 접근은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집단적 대응력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참여와 집단적 실천

가짜뉴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교육이나 인지 훈련을 넘어서, 지역사회 차원의 집단적 실천과 참여 구조 마련이 필수적이다(Christens, 2012). 공동체심리학은 개인의 인지 변화나 행동 수정이 지속되기 위해 그러한 변화를 지지하는 사회적 맥락과 상호작용의 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커뮤니티 기반의 토론 모임, 미디어 리터러시 워크숍, 주민 주도의 정보 검증 활동 등은 구성원 간 신뢰 기반의 소통을 촉진하고, 비판적 사고와 책임 있는 정보 공유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Mihailidis, 2018).

더불어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지닌 사람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소통 구조는 필터버블과 에코채임버 현상을 완화하고, 사회적 연대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체심리학은 가짜뉴스가 조장하는 이분법적 사고, 혐오, 배제의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 포용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집단적 실천을 핵심 전략으로 제안한다. 정보에 대한 전문가 중심의 일방향적 전달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정보 문제를 공동으로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적 과정이 강조되며, 커뮤니티 미디어 활동, 공론장 운영, 시민 감시단 등의 실천은 주민들의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 주권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Prilleltensky, 2005).

이러한 실천적 접근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허위 정보 노출이 초래하는 인지적 혼란, 정서적 불안, 사회 불신에 대응하는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Southwick et al., 2014). 심리학은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능력뿐 아니

라, 구성원들이 회복탄력성과 집단적 판단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짜뉴스 수용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경험 기반 개입 전략의 개발이 요구된다(Lewandowsky et al., 2017; Lewandowsky et al., 2012). 궁극적으로 공동체심리학은 심리학이 정보 불평등과 사회적 분열을 극복하고, 건강한 정보 생태계와 민주적 시민 참여 문화를 구축하는 데 실천적 기여를 해야 함을 강조한다(Nelson & Prilleltensky, 2020).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회복력

가짜뉴스는 단순한 정보 오류를 넘어, 공동체 내 신뢰 기반과 사회적 관계망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영향을 동반한다. 특히 사회적 신뢰와 상호존중, 협력 규범이 약화된 환경에서는 허위 정보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며, 이로 인해 공동체의 내적 응집력이 훼손될 위험이 높아진다(Tsfati et al., 2020). 공동체심리학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공동체 회복력(community resilience)의 복원과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안한다.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 상호성, 네트워크 연결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는 자율적인 정보 검증 문화와 내재적 면역 체계의 형성에 기여한다(Putnam, 2000; Lazer et al., 2018). 예컨대, 지역 커뮤니티 라디오, 주민 주도 공공포럼, 마을회의 등은 수평적이고 참여적인 정보 순환 구조를 통해 중앙집중적 미디어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뢰에 기반한 정보 공유 문화를 촉진할 수 있다(Kim & Ball-Rokeach, 2006). 이러한 정보 생태계는 위기 상황에서도 정보 혼란을 줄이고,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

여한다.

나아가 가짜뉴스의 확산은 종종 사회적 고립과 정치적 냉소주의와 맞물려 나타나며, 이는 공동체 해체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공동체심리학은 이러한 맥락을 단순히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 사회적 지지와 신뢰 자본의 회복을 통한 구성원의 비판적 인식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Campbell & Jovchelovitch, 2000). 공동체 내부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 존재하고, 존중과 소통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을 때, 가짜뉴스의 설득력은 자연스럽게 약화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집단 기반의 심리교육, 회복탄력성 강화 워크숍, 정보 리터러시 훈련 등은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와 심리적 안정성을 높이고, 공동체 정체감과 책임감을 회복하는데 효과적이다(Hobfoll et al., 2007). 이처럼 심리학은 정보 왜곡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신뢰 기반을 재건하는데 핵심적인 실천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문화적 맥락과 대안적 담론

공동체심리학은 정보 대응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맥락과 실제 일상적인 삶의 맥락(lifeworld)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Wallerstein et al., 2017). 가짜뉴스는 단순히 정보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포, 불안, 정체성 위기와 같은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문화적 이야기를 통해 확산되기 때문에, 단순한 과학적 반박이나 사실 전달만으로는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다(Tsfati et al., 2020). 따라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문화적으

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와 표현적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체심리학은 이러한 대안적 담론(alternative narratives)을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에 맞게 발굴하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널리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Campbell & Jovchelovitch, 2000). 예컨대 건강 관련 가짜뉴스에 대응할 때, 단순히 과학적 사실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강에 대한 가치관, 돌봄의 전통, 삶의 경험을 반영한 이야기 방식으로 접근할 때 더 많은 신뢰와 수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설득력을 높이는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체심리학의 핵심적 개입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Castaño et al., 2022).

논의 및 제언

비판심리학과 공동체심리학의 이론적 접점과 통합

가짜뉴스는 단순한 정보 오류나 사실 왜곡을 넘어,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반응과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공동체의 신뢰, 사회적 결속,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는 복합적 사회심리 현상이다. 가짜뉴스는 감정을 자극하고 집단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공적 이해를 왜곡하고, 사회 제도와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민주적 소통을 약화시킨다. 또한 공공 보건, 정치 참여, 사회적 소수자 인식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개인

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현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서 심리학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가짜뉴스를 단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와 심리 과정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다층적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판심리학과 공동체심리학이라는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가짜뉴스 수용과 확산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인지적, 정서적, 집단적,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조망하였다.

비판심리학은 거시적 권력 구조와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맞추고, 공동체심리학은 미시적 공동체 환경과 집단 내 상호작용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관점은 분석 단위가 다르지만, 가짜뉴스를 개인 내적 요인이 아닌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두 관점 모두 주류 심리학의 개인주의적 설명을 넘어, 맥락과 구조를 중시하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접점을 갖는다. 특히 심리학이 개인의 적응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구조에 실천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실천적 방향성에서 두 이론은 공통된 입장을 공유한다.

이처럼 공통된 지향 속에서 두 이론은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서로 상보적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 두 관점 모두 현상 이면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 사회 변화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가짜뉴스 대응 전략 수립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비판심리학이 가짜

뉴스의 배후에 있는 정치·경제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구조적 변혁의 필요성을 제시한다면, 공동체심리학은 지역사회 현장에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행동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방법론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비판심리학이 ‘누가 이 정보를 만들고 퍼뜨리는가?’, ‘그것이 유지하려는 기득권 질서는 무엇인가?’, ‘왜 이 문제가 발생하며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반면, 공동체심리학은 ‘이 정보가 유통되는 사회관계망은 어떠한가?’, ‘사람들은 왜 이 정보를 공유하고 믿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욕구(소속감, 정체성)는 무엇인가?’, ‘변화를 누구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따라서 두 이론은 각각 구조의 진단과 실천의 처방을 담당하며, 거시분석과 미시개입의 상호보완적 틀을 형성한다. 비판심리학의 비판의식은 공동체 개입에 비전과 정의감을 부여하고, 공동체심리학의 참여 실천은 비판의식을 구체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추진력이 된다. 두 이론 모두 허위정보는 개인이 혼자만 들어내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적 권력과 관계의 복합적 흐름 속에서 형성되고 작동한다는 전제를 공유하며, 이러한 관점은 심리학적 개입의 범위와 효과성을 확장시킨다. 가령, 공동체 기반의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비판심리학의 통찰을 적용하면, 단순한 기술적 사실검증 능력뿐 아니라 미디어의 권력관계와 담론 구조에 대한 비판적 성찰까지 교육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이 피상적인 팩트 체크를 넘어서 정보 생산의 정치경제적 배경까지 인식하게 함으로써, 보다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비판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 반대

로, 비판심리학의 문제제기가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심리학이 강조하는 풀뿌리 참여와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이다. 거시적 담론 변화는 개인들의 일상 행동 변화와 공동체 차원의 움직임으로 구체화될 때 실효성을 갖기 때문이다.

물론 두 관점 사이에는 긴장관계도 존재한다. 비판심리학은 때때로 급진적 사회비판에 집중하여 구체적인 개입기법이나 실증적 평가를 경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공동체심리학은 비교적 실용적 접근에 초점을 두면서 체제 내 순응적 개입에 머무를 우려가 있으며, 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간과할 위험도 존재한다. 또한 비판심리학은 때때로 공동체 내부의 주류 담론까지 비판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하여, 공동체 내부의 합의 형성을 중시하는 공동체심리학의 접근과 충돌할 여지도 있다.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실천 전략의 우선순위를 놓고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이론은 허위정보로부터 구성원들의 정신적 자율성과 공동체 건강을 지킨다는 궁극적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Prilleltensky, 2012). 공동체심리학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의 창고라면, 비판심리학은 그 실천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심리학계에서는 심리학적 개입의 정치사회적 유효성(psychopolitical validity)을 강조하며, 개인 수준의 개입과 사회 구조 변화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Prilleltensky, 2008), 이는 두 관점의 융합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실질적 시너지의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가짜뉴스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비판심리학은 구조를 진단하고, 공동체심리학은

그 구조 속에서 인간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접근은 심리학이 개인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의 구조적 전환으로 확장되도록 하는 이론적·실천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심

리학과 공동체심리학의 관점, 그리고 이들의 통합적 접근을 비교한 내용을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은 세 관점의 문제 초점, 핵심 개념, 설명 방식, 대응 전략, 장점 및 한계를 구조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이론 간의 상호보완적 가능성과 실천적 함의를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

표 1.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심리학, 공동체심리학, 및 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

관점	비판심리학	공동체심리학	통합 관점
문제초점	정보의 권력 관계 왜곡 및 지배 이데올로기 유지 측면에 주목. 가짜뉴스를 기득권이 여론을 조작하는 수단으로 해석	공동체 내 신뢰 파괴와 관계 훼손 측면에 주목. 가짜뉴스를 공동체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해석	권력구조와 공동체 역동 양 측면에서 파악. 허위 정보의 구조적 배경과 현장 영향을 모두 고려한 다층적 해석
핵심개념	정보 권력, 이데올로기, 허위 의식, 비판적 의식화 등	공동체 회복력, 권한부여, 참여, 소속감, 신뢰 등	비판적 시민성, 정보 주권, 집합 효능감, 사회적 책임 등
설명방식	거시적 비판 담론: 미디어 구조 분석, 사회·정치 맥락에서의 의미 파악. 개인 신념을 사회구조의 반영으로 봄.	미시적 맥락 담론: 공동체경험과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심리현상으로 봄. 현장의 질적 정보와 사례증시	맥락적 통합: 개인-공동체-사회 연계 모형. 예) 허위 정보를 개인 심리, 사회 관계, 권력 구조가 교차한 결과로 모델화
대응전략	구조 개혁과 의식화: 미디어 개혁, 규제 정책, 시민의 비판 교육, 권력 감시 강화 등 top-down 개입 강조	참여 실행과 예방: 미디어리터러시 워크숍, 커뮤니티대화모임, 주민 주도의 팩트체크 등 bottom-up 활동 강조	통합적 전략: top-down과 bottom-up 방식의 결합 예) 정부·플랫폼의 지원 아래 시민 팩트체크 육성, 지역 미디어센터와 학교 협력 프로그램 운영
장점	거시적 통찰로 근본 원인을 조명함. 권력비판을 통해 사회 변화 동력 확보	현장 밀착으로 실효성 높음;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변화 가능.	포괄적 접근으로 전략의 시너지 기대, 인식 변화와 행동 변화를 연계하여 지속적 문제 해결 구조 형성
한계	현장 실행력 부족 시 공허한 이론에 그칠 우려, 거시 담론이 시민 정서와 거리감 발생 가능성 있음.	구조 문제 간과 시 임시방편에 그칠 우려, 지역에 따라 편차 커서 광범위한 영향에 한계가 있음.	조율 어려움: 다층 목표로 인한 자원 분산 위험; 거시-미시 간 협업 체계 구축 필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심리학적 실천 전략

가짜뉴스는 단순한 정보 문제를 넘어 사회 심리적 복합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비판적 사고 역량과 더불어 공동체 차원의 집단적 대응력을 아우르는 통합적 실천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교육 중심의 접근을 넘어, 참여와 권한부여, 신뢰 회복을 기반으로 한 실천적 개입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 시민 팩트체크 활성화와 비판적 시민성 함양은 정보 환경에 대한 능동적 개입을 가능케 하는 핵심 전략이다. 시민이 스스로 허위 정보를 식별하고 교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팩트체크 프로그램은 비판적 시민성을 형성하는 실질적 방법으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통해 시민 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 개발과 교육 확대를 추진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20). 이는 정부가 시민을 단순한 정보 소비자가 아닌 공동생산자로 포지셔닝한 사례이며, 정보 주권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해외에서는 트위터(X)의 커뮤니티 노트 제도가 대표적이다. 클라우드소싱 기반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허위 게시물의 확산을 62% 줄이고, 정보 게시자가 자진 삭제할 확률을 2배 이상 높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Chuai et al., 2024). 이는 시민 참여가 허위 정보 유통을 억제하는 데 실질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심리학은 시민들에게 검증 중심의 회의적 사고(skeptical thinking)와 사실 검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나 지역

사회 기반의 ‘팩트체크 동아리’, ‘시민 검증단’ 등의 실천적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역 기반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과 정보 주권의 확립이 필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가짜뉴스 대응의 1차 예방 전략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지역사회 맥락에 맞춘 실천과 정보 주권 의식의 함양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이다. 단순한 정보 해석 능력 향상을 넘어, 시민이 정보 환경의 구조적 문제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주체적 인식이 중요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22~2023년 기간 동안 전국 대학과 지역 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 대상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였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이처럼 지역 맥락에 뿌리내린 정보 교육은 정보 판단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공동체 전체의 정보 주권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나아가 지역 공동체 라디오, 마을 미디어 등 대안 정보원을 육성하고, 신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노력은 외부의 왜곡 정보에 대한 면역 체계를 지역 차원에서 구축하는 효과를 낳는다.

셋째, 공동체 회복력과 신뢰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은 허위 정보로 인해 훼손된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고,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도 공동체가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장기적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PEN America는 ‘Trusted Messenger’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인물이 허위 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주변인과 대화하도록 훈련하였다(PEN America, 2025). 총 23회의 워크숍을 통해 양성된 501명의 전달자는 약 1,300건의 대화를 수행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새로운 뉴스 관점을 제시하는 데 높은 자신감을 보였다. 이러

한 활동은 공동체 내의 극단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다리 놓기 대화(bridging dialogue)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더 나아가 회복적 서클(restorative circle)이나 퍼실리테이터가 있는 숙의 토론 기법과 같은 참여 기반 대화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비판적 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신뢰 회복형 개입은 정량화된 지표로는 단기간에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나, 공동체의 장기적 응집력과 사회적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넷째,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과 권한부여 촉진은 앞선 모든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심리학이 공공 영역에 개입하여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사회와 국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다. 예컨대 가짜뉴스 대응 협의체에 심리학자와 시민단체 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근거 기반의 정책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과 자원을 배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미디어센터나 평생학습관을 통해 교육과 실천 활동을 제도화하고, 시민 주도 팩트체크 활동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자율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권한부여적 환경은 시민이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전환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상의 네 가지 전략은 비판심리학과 공동체심리학의 통합적 관점 아래 상호작용하며 작동하는 유기적 개입 체계이다. 시민 팩트체크와 정보 리터러시는 비판적 시민성을 형성하며, 신뢰 회복 프로그램과 참여적 거버넌스는 공동체 집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기능한다. 이들 전략이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될 때, 개인의 인지적 면역력과 공동체의 사회적 면역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가짜뉴스가 퍼질 수 없는 건강한 정보 생태계 조성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종합하자면, 가짜뉴스는 단순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권력 구조, 심리적 동기 등이 교차하는 복합적 현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학이 개인 내면의 설명을 넘어서 사회 구조와 맥락을 분석하고 개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한 이론적 토대이자 실천 전략으로 비판심리학과 공동체심리학의 통합적 관점이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시민 팩트체크 활성화, 지역 기반의 정보 리터러시 교육, 공동체 회복력 강화, 권한부여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네 가지 실천 전략은 이 두 이론의 강점을 실현하는 구체적 경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심리학이 민주주의 회복과 공공 신뢰 재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학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전략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평가와 함께,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심리학은 보다 공공적이고 구조 변화 지향적인 사회개입 학문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희, 박영주, 이혜원, 이현주, 허엽, 양연희, 한정훈, 윤소민 (2023). 가짜뉴스 실태와 대응방안 - OECD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 KCC-2023-34). 방송통신위원회.
- 김종현 (2019). 가짜뉴스의 규제에 관한 비교 법적 연구-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 60(3), 61-102.
- 남승현 (2022). 가짜뉴스 연구 메타분석. *인문 사회* 21, 13(5), 777-792.
- 류승아 (2023). 현대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심리학의 방향: 공동체심리학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 문제*, 29(4), 637-655.
- 방송통신위원회 (2020).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종합계획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방송통신위원회 (2022).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 신하연, 박채림, 민영 (2024). 재난보도와 언론 신뢰: 세월호와 10·29 참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28, 103-140.
- 이성욱 (2024). 정치양극화와 가짜뉴스, 그리고 진실성의 소명. *문화와 융합*, 46(특별1), 315-328.
- 정안숙, 어유경, 한규석 (2017). 국내의 사회문제에 대한 심리학 연구의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1994~2015) 게재 논문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2), 159-181.
- 정안숙 (2015). 현대한국사회에서 공동체심리학의 역할: 공동체심리학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3), 667-683.
- 조은희 (2022). SNS 뉴스 전파행동의 특성: 가짜뉴스 식별, 인식, 대응행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3(1), 307-328.
- 최창식 (2022). 정치적 이슈로 인한 가족 내 세대 갈등에 대한 자녀들의 대응: 갈등과 모순, 그리고 대처의 유형. *커뮤니케이션 이론*, 18(1), 59-110.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2023년 미디어교육 평생교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팩트체크넷 운영 현황 보고서. 한국언론진흥재단.
- Allcott, H., & Gentzkow, M. (2017).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1(2), 211-236.
- Bajoghli, N., Ahmadi, S., & Krieger, T. (2023). An exploratory case study with young Afghan refugees: Access to mental health services through community-based interven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10), 2986.
- Bawden, D., & Robinson, L. (2009). The dark side of information: Overload, anxiety and other paradoxes and pathologie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5(2), 180-191.
- BBC. (2017). Fake news: *What is it? And how to spot it*.
<https://www.bbc.co.uk/newsround/38906931>
- Bessi, A., Petroni, F., Vicario, M. D., Zollo, F., Anagnostopoulos, A., Scala, A., ... & Quattrociocchi, W. (2016). Homophily and polarization in the age of misinformation. *The European physical journal special topics*, 225, 2047-2059.
- Caceres, M. M. F., Sosa, J. P., Lawrence, J. A., Sestacovschi, C., Tidd-Johnson, A., Rasool, M. H. U., ... & Fernandez, J. P. (2022). The impact of misinformation on the COVID-19 pandemic. *AIMS public health*, 9(2), 262.
- Campbell, C., & Jovchelovitch, S. (2000). Health, community and development: Towards a social

- psychology of participation.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0(4), 255-270.
- Castañó, P., Nunez, A. M., & Perez, C. (2022). Community-based strategies to counter misinformation: Cultural narratives and social capital.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0(3), 1151-1166.
- 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Policy. (2018). Harlem Children's Zone.
- Chibanda, D., Weiss, H. A., Verhey, R., Simms, V., Munjoma, R., Rusakaniko, S., ... & Araya, R. (2016). Effect of a primary care - based psychological intervention on symptoms of common mental disorders in Zimbabwe: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316(24), 2618-2626.
- Cho, J., Kim, H., & Lee, S. (2021). Social media echo chambers and political polarization in South Korea: An analysis of Twitter discourse.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31(2), 123-139.
- Chou, W.-Y. S., Gaysynsky, A., & Vanderpool, R. C. (2020). Using a global pandemic as a teachable moment to promote vaccine literacy and build resilience to misinform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10(3), S284-S285.
- Christens, B. D. (2012). Targeting empowerment in community development: A community psychology approach to enhancing local power and well-being.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7(4), 538-554.
- Chuai, Y., Pilarski, M., Renault, T., Restrepo-Amariles, D., Troussel-Clément, A., Lenzini, G., & Pröllochs, N. (2024). Community-based fact-checking reduces the spread of misleading posts on social media. arXiv. <https://arxiv.org/abs/2409.08781>
- DiResta, R., Shaffer, K., Ruppel, B., Sullivan, D., Matney, R., Fox, R., ... & Johnson, B. (2019). The tactics & tropes of the Internet Research Agency. *University of Nebraska - Lincoln*. <https://digitalcommons.unl.edu/cgi/viewcontent.cgi?article=1003&context=senatedocs>
- Ekström, M., Ramsälv, A., & Westlund, O. (2021). The epistemologies of breaking news. *Journalism Studies*, 22(2), 174-192.
- European Commission. (2018). Final report of the High Level Expert Group on Fake News and Online Disinformation.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Farkas, J., & Schou, J. (2018). Fake news as a floating signifier: Hegemony, antagonism and the politics of falsehood. *Javnost - The Public*, 25(3), 298-314.
- Fessler, D. M., Pisor, A. C., & Navarrete, C. D. (2014). Negatively-biased credulity and the cultural evolution of beliefs. *PloS one*, 9(4), e95167.
- Fox, D., Prilleltensky, I., & Austin, S. (Eds.). (2009). *Critical Psychology: An Introduction* (2nd ed.). *SAGE Publications*.
- Guess, A., Nagler, J., & Tucker, J. (2019). Less than you think: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fake news dissemination on Facebook. *Science Advances*, 5(1), eaau4586.
- Halpern, D. F., & Dunn, D. S. (2021). "Critical Thinking: A Model of Intelligence for Solving Real-World Problems." *Journal of Intelligence*,

- 9(2), 22.
- Harlem Children's Zone. (2009). Whatever it takes: A white paper on the Harlem Children's Zone.
- Hobfoll, S. E., Watson, P., Bell, C. C., Bryant, R. A., Brymer, M. J., Friedman, M. J., ... & Ursano, R. J. (2007). Five essential elements of immediate and mid-term mass trauma intervention: Empirical evidence.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70(4), 283-315.
- Howard, P. N., Kollanyi, B., & Bradshaw, S. (2017). Junk news and bots during the UK election: What are UK voters sharing over Twitter? Oxford Internet Institute.
- Kim, Y. C., & Ball-Rokeach, S. J. (2006). Civic engagement from a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erspective. *Communication Theory*, 16(2), 173-197.
- Klutsey, B. (2021, March 26). Social and political trust. *Discourse Magazine*.
- Lazer, D. M., Baum, M. A., Grinberg, N., Friedland, L., Joseph, K., Hobbs, W., & Mattsson, C. (2018). The science of fake news. *Science*, 359(6380), 1094-1096.
- Le, M. T. (2024). The spread of fake news: Disclosure willingness role. *Heliyon*, 10(14).
- Levitsky, S., & Ziblatt, D. (2024). How democracies die. In *Ideals and Ideologies* (pp. 73-80). *Routledge*.
- Lewandowsky, S., Ecker, U. K. H., & Cook, J. (2017). Beyond misinformation: Understanding and coping with the "post-truth" era.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Memory and Cognition*, 4(4), 353-369.
- Lewandowsky, S., Ecker, U. K., Seifert, C. M., Schwarz, N., & Cook, J. (2012). Misinformation and its correction: Continued influence and successful debiasi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13(3), 106-131.
- Lin, Y., Hu, Z., Alias, H., & Wong, L. P. (2020). Influence of mass and social media on psychobehavioral responses among medical students during the downward trend of COVID-19 in Fujian, Chin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22(7), e19982.
- Loomba, S., de Figueiredo, A., Piatek, S. J., de Graaf, K., & Larson, H. J. (2021). Measuring the impact of COVID-19 vaccine misinformation on vaccination intent in the UK and USA. *Nature Human Behaviour*, 5(3), 337-348.
- Martel, C., Pennycook, G., & Rand, D. G. (2020). Reliance on emotion promotes belief in fake news. *Cognitive Research: Principles and Implications*, 5(47).
- Marwick, A., & Lewis, R. (2017). Media manipulation and disinformation online. *New York: Data & Society Research Institute*, 359, 1146-1151.
- Matz, D. C., & Wood, W. (2005). Cognitive dissonance in groups: The consequences of disagre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22-37.
- McCright, A. M., & Dunlap, R. E. (2011). The politicization of climate change and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s views of global warming, 2001-2010. *The Sociological Quarterly*, 52(2), 155-194.

- Mihailidis, P. (2018). Civic media literacies: Re-imagining engagement for civic intentionality.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43(2), 152-164.
- Mihailidis, P., & Viotty, S. (2017). Spreadable spectacle in digital culture: Civic expression, fake news, and the role of media literacies in “post-fact” socie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1(4), 441-454.
- Miller, K. E., & Rasmussen, A. (2010). War exposure, daily stressors, and mental health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ettings: Bridging the divide between trauma-focused and psychosocial frameworks. *Social Science & Medicine*, 70(1), 7-16.
- Mozur, P. (2018). A Genocide Incited on Facebook, With Posts From Myanmar’s Military.
- Munusamy, S., Khairuddin, L. R., Kamaruddin, M. I. H., Ahmad, A., & Yaacob, N. A. (2024). Psychologic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fake news among social media users: A systematic review. *BMC Psychology*, 12(1), 673.
- Nelson, G., & Prilleltensky, I. (2020). Community psychology: In pursuit of liberation and well-being (3rd ed.). *Bloomsbury Publishing*.
- New York Times. (2016, November 25). *Inside a fake news sausage factory*.
<https://www.nytimes.com/2016/11/25/world/europe/fake-news-donald-trump-hillary-clinton-georgia.html>
- Nisbet, E. C., & Kamenchuk, O. (2021). Russian news media, digital media, informational learned helplessness, and belief in COVID-19 misinfo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33(3), 571-590.
- Nyhan, B., & Reifler, J. (2010). When corrections fail: The persistence of political misperceptions. *Political Behavior*, 32(2), 303-330.
- Oswald, L., & Bright, J. (2021). *How do climate change skeptics engage with opposing views?* arXiv preprint. Available from: <https://arxiv.org/abs/2102.06516>
- Pariser, E. (2011). The filter bubble: What the Internet is hiding from you. *penguin UK*.
- Park, M., & Chai, S. (2024). What Makes Fake News Appeal to You? Empirical Evidence from the Tweets Related to COVID-19 Vaccines. *SAGE Open*, 14(3), 21582440241257671.
- PEN America. (2025). Local “Trusted Messenger” Trainings Shown to be an Effective Tool Against the Global Challenge of Disinformation.
<https://pen.org/press-release/local-trusted-messenger-trainings-shown-to-be-an-effective-tool-against-the-global-challenge-of-disinformation/>
- Pennycook, G., & Rand, D. G. (2018). The Implied Truth Effect: Attaching Warnings to a Subset of Fake News Stories Increases Perceived Accuracy of Stories Without Warnings. *Management Science*, 64(11), 4944-4957.
- Pennycook, G., & Rand, D. G. (2019). Lazy, not biased: Susceptibility to partisan fake news is better explained by lack of reasoning than by motivated reasoning. *Cognition*, 188, 39-50.
- Pennycook, G., & Rand, D. G. (2021). The psychology of fake news. *Trends in Cognitive*

- Sciences*, 25(5), 388-402.
- Pennycook, G., Epstein, Z., Mosleh, M., Arechar, A. A., Eckles, D., & Rand, D. G. (2020). Understanding and reducing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online. *Nature Human Behaviour*, 4(12), 1342-1350.
- Prilleltensky, I. (2005). Promoting well-being: Time for a paradigm shift in health and human services.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3(66_suppl), 53-60.
- Prilleltensky, I. (2008). The role of power in wellness, oppression, and liberation: The promise of psychopolitical valid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2), 116-136.
- Prilleltensky, I. (2012). Wellness as fair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9(1-2), 1-21.
- Pulido-Martínez, H. C., & Tamayo, A. L. G. (2024).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y and coloniality: Interpretative repertoires. *Annual Review of Critical Psychology*, 17, 163-180.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 Qouta, S., Punamäki, R. L., & El Sarraj, E. (2008).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mental health in war and military violence: The Palestinian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2(4), 310-321.
- Rathje, S., Van Bavel, J. J., & van der Linden, S. (2021). Out-group animosity drives engagement on social media.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8(26), e2024292118.
- Reglitz, M. (2022). Fake News and Democracy. *Journal of Ethics and Social Philosophy*, 22(2), 162-187.
- Ridley, M., Rao, G., Schilbach, F., & Parel, V. (2020). Poverty, depression, and anxiety: Causal evidence and mechanisms. *Science*, 370(6522), eaay0214.
- Rimé, B. (2009). Emotion elicits the social sharing of emotion: Theory and empirical review. *Emotion Review*, 1(1), 60-85.
- Roozenbeek, J., Schneider, C. R., Dryhurst, S., Kerr, J., Freeman, A. L. J., Recchia, G., ... & van der Linden, S. (2020). Susceptibility to misinformation about COVID-19 around the world. *Royal Society Open Science*, 7(10), 201199.
- Seikkula, J., & Olson, M. (2003). The open dialogue approach to acute psychosis: Its poetics and micropolitics. *Family Process*, 42(3), 403-418.
- Shao, C., Ciampaglia, G. L., Varol, O., Flammini, A., & Menczer, F. (2018). The spread of low-credibility content by social bots. *Nature Communications*, 9(1), 4787.
- Smith, S. E. (2019). Feminist therapy with severe mental illness and complex trauma (Master's capstone project, University of Denver).
- Solomon, J. (2022). The weaponization of disinformation in democratic societies. *Journal of Conflict and Media Studies*, 1(1), 1-18.
- Soroya, S. H., Farooq, A., Mahmood, K., Isoaho, J., & Zara, S. E. (2021). From information seeking to information avoidance: Understanding the health information behavior during a global health crisis. *Information*

- Processing & Management*, 58(2), 1024-40.
- Southwick, S. M., Bonanno, G. A., Masten, A. S., Panter-Brick, C., & Yehuda, R. (2014). Resilience definitions, theory, and challenges: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5(1), 253-38.
- Sundar, S. S., & Nass, C. (2001). Conceptualizing sources in online new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8(1), 90-104.
- Taber, C. S., & Lodge, M. (2006). Motivated skepticism in the evaluation of political belief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3), 755-769.
- Tandoc, E. C., Lim, Z. W., & Ling, R. (2018). Defining "fake news": A typology of scholarly definitions. *Digital Journalism*, 6(2), 137-153.
- Trickett, E. J. (2009). Community psychology: Individuals and interventions in community contex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395-419.
- Tsemberis, S., Gulcur, L., & Nakae, M. (2004). Housing First, consumer choice, and harm reduction for homeless individuals with a dual diagnosi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4), 651-656.
- Tsfati, Y., Boomgaarden, H. G., Strömbäck, J., Vliegenthart, R., Damstra, A., & Lindgren, E. (2020). Causes and consequences of mainstream media dissemination of fake news: Literature review and synthesis.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44(2), 157-173.
- Tucker, J. A., Guess, A., Lyons, B., Stiers, D., & van der Linden, S. (2018). Social media, political polarization, and political disinformation: A review of the scientific literatur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33(4), 755-785.
- Vosoughi, S., Roy, D., & Aral, S. (2018). The spread of true and false news online. *Science*, 359(6380), 1146-1151.
- Wallerstein, N., Duran, B., Oetzel, J. G., & Minkler, M. (Eds.). (2017).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for health: Advancing social and health equity. *John Wiley & Sons*.
- Walter, N., Brooks, J. J., Saucier, C. J., & Suresh, S. (2021). Evaluating the impact of attempts to correct health misinformation on social media: A meta-analysis. *Health communication*, 36(13), 1776-1784.
- Wang, Y., McKee, M., Torbica, A., & Stuckler, D. (2024). A comprehensive analysis of COVID-19 misinformation, public trust, and vaccine hesitancy.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26(1), e56931.
- Weeks, B. E. (2015). Emotions, partisanship, and misperceptions: How anger and anxiety moderate the effect of partisan bias on susceptibility to political misinform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65(4), 699-719.
- Wright, S., Watson, N., & Pearson, C. (2020). Poverty and mental health: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implications. *BJPsych Bulletin*, 44(5), 193-197.
- Yang, A. O., & Lee, S. J. (2021). COVID-19 and anti-Asian violence: Exploring the role of social media in the spread of racism.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7(9), 1903-1920.
- Yang, K. C., Pierri, F., Hui, P. M., Axelrod, D.,

- Torres-Lugo, C., Bryden, J., & Menczer, F. (2021). The covid-19 infodemic: Twitter versus facebook. *Big Data & Society*, 8(1), 20539517211013861.
- Young, S. L. (2024). Worry-YING and Worry-YANG: A critical feminist study with women.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45(3), 185-194.

논문 투고일 : 2025. 05. 08
1 차 심사일 : 2025. 05. 28
게재 확정일 : 2025. 06. 13

Understanding and Responding to Fake News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Insights from Critical Psychology and Community Psychology

Bo Kyung Kim Hye Won Lee Hyun-nie Ahn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conceptualizes fake news as a complex socio-psychological phenomenon that intersects individual psychological processes and broader social structures. Departing from existing research that focuses primarily on internal factors such as confirmation bias and emotional responses, it adopts an integrative approach that examines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behind the reception and spread of fake news across cognitive, emotional, behavioral, group, and structural dimensions. Grounded in critical psychology and community psychology, the study analyzes how power relations and social contexts shape misinformation and explores psychology's role in addressing it. These two perspectives-critical psychology's focus on macro-level power and community psychology's emphasis on local interaction-are viewed as complementary, offering a framework for expanding psychology's public engagement. Based on this integration, the study outlines practical directions for intervention and argues that psychology must evolve beyond individual healing to contribute to collective recovery and structural change, with attention to diverse socio-cultural contexts.

Key words : Fake News, Critical Psychology, Community Psychology, Power Structure, Social Context, Public role of psychology